



【검토보고서】

2018. 5. 18(금)
제 292 회 임시회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현】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세정과장)
- 제출일 : 2018년 5월 8일

2. 제안이유

-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일몰규정)이 2017. 12.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일부개정된 사항은 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함(안제3조)
-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안제6조)
- 다. 복잡한 조문체계 정비(안제1조,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 라. 이외 조항은 기존 조례와 동일하며 감면 적용시한이 2017.12.31.로 종료됨에 따라 2020.12.31.까지 연장함

4. 기타사항

- 입법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18. 3. 28. ~ 4. 17.(21일간)
- 부서협의
 - 가)협의기간 : 2018. 3. 14. ~ 3. 20.(7일간)
 - 나)협의결과 :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사유

-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및 대중교통 확충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감면기간, 감면률, 감면대상 등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 개정안은 본조례의 일몰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감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주요개정 내용

1) 감면기한 조정(안 제3조, 제5조, 부칙)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u>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u> 가 과세기 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u>100분의75 (20</u> <u>16. 12. 31까지), 100분의50 (2017. 1. 1</u> <u>~ 2017. 12. 31)」을</u> 경감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u>종교단체(「민법」----- 재단</u> <u>법인에 한정한다)</u> ----- ----- ----- ----- -- <u>100분의50을 2018. 12. 31일까지</u> -----.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 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에서 <u>2017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u>사람은 「농업·농촌 및 식</u> <u>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u> ----- ----- ----- -- <u>2020년 12월 31일</u> ----- ----- -----

<p>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 ----- ----- ----- -----.</p>
<p>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u>자</u></p>	<p>1. ----- -----제50조제1항----- ----- ----- ----- 사람</p>
<p>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u>자</u></p>	<p>2. ----- ----- ----- 사람</p>
<p>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u>자</u></p>	<p>3. ----- ----- ----- ----- 사람</p>

▶ 부칙(개정전 소급적용)

현 행	개 정 안
<u>부칙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u>	<u>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u> 레는 공포한 날부터

<p><u>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신 설></u></p>	<p><u>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u></p> <p><u>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u></p>
<p><u>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p>	<p><u>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p> <p><u>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p>

- 감면 기간이 종료된 대상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감면률을 정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함.

※ 관련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p>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p> <p>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p> <p>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p> <p>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p>
--

2)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

※ 개정내용

현행조례	전부개정안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같은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각각 공제한다.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 법령에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함.

※ 관련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조문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의2)

※ 개정내용

현행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양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 ----- ----- ----- ----- ----- ----- -----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 ----- -----

<p>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p> <p><u><신 설></u></p> <p>제4조의2(문화재보호 구역안 부동산 감 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50을 추가 경감한다.</p>	<p>-----.</p> <p>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 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u><삭 제></u></p>
---	--

- 현행 복잡한 조문으로 구성된 일부조문에 대하여 알기쉬운법령 정비기
준에 맞는 조문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였음.

6.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조례 일몰 시효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법령개정사항의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